
4. 한국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 미국이 대중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①중국 부상의 좌절 유도'를 선택했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중사이에서 분명한 입장과 안보관련 요구들에 대해 점차 강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의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임.

- 남중국해에서의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한국 참여 요구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과의 표준 경쟁과 '부분적 decoupling'에 관한 미국의 지지 요구
-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타이완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
- 미국의 INF 조약 탈퇴 후 한국에 단·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 등이 한미 사이에서 논의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또한 한국에 대해 '중국 선택' 또는 최소한 '중립'의 위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예상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해 한국은 우선적으로 크게 5가지의 정책적 대응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4-1.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미동맹의 역할

» 현재 역내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와 한미동맹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향후 미국이 대중 전략적 압박을 위해 한국에게 요구할 사항들 중 상당수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임.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외전략 수립과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미중 무역 마찰과 대립을 포함해 경제적, 군사·안보적, 정치적 영역에서 양국 간의 장기적, 구조적인 갈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경쟁의 최종 승리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미국의 힘의 우위가 예상되며, 중국이 최소한 역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경쟁 능력을 갖추는 상황도 단기적인 기간에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 따라서 향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강화 수준이 한국의 정책적 고려 부분이 될 것임.

-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트럼프 요인’에 기인한 현상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동맹국 관계’ 설정에 관한 정책적 차이점의 분석이 필요함.
- 특히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나타날 미국의 국내정치 판도와 각 당 후보의 동맹 정책에 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됨.

4-2. 한중 전략채널 복구/강화를 통한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 유도

➤ 앞서 언급한대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우위가 예견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만약 미국이 향후 중국을 전략적으로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게 요구할 협력 현안들은 필연적으로 한중관계에 ‘갈등’과 ‘도전’의 요인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관련된 요구와 선택적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track 1 & 1.5의 전략대화를 통해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에 대해 한중 간의 선제적인 논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었던 갈등요인들이 설사 한중사이에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양국관계에 조율된 ‘제한된 손상 (limited damage)’이 나타나도록 한국 對中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할 시기임.

- 향후 역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점차 강화하는 과정을 상정해 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압력 또한 증가할 것이며,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도 깊이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병행을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음.

» 이를 위해 특히 사드 이후 중단된 ①트랙1에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 채널인 ‘한·중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와 ②1.5 트랙인 ‘한중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의 조속한 복구가 필요함.

- 한·중 전략 채널을 통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발생 가능한 한중 간의 갈등요소를 ‘선제적인 논의’를 통한 양국관계의 ‘제한된 손상’ 유도는 물론, ‘빠른 회복력 (resilience)’을 보일 수 있도록 갈등 및 위기관리가 필요함.

» 전략 채널을 통한 ‘선제적인 논의,’ ‘제한된 손상’ 유도, 양국관계의 ‘빠른 회복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압박의 결과로 한중관계가 THAAD

한중 간의 선제적인 논의를 유도하고, 예상되었던 갈등요인들이 설사 한중사이에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양국관계에 조율된 ‘제한된 손상 (limited damage)’이 나타나도록 한국 對中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할 시기...

현안 당시와 같이 다시금 파손된다면 한국은 물론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을 한중 모두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함.

- 현재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 내에 민족주의 감정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중국이 다시금 THAAD 현안 당시와 같이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최근 對日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반감 증가는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여론이 급속히 퍼져나갈 것임.
- 이러한 한국 내 여론상황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및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 강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임.

한중이 '선제적 논의,' '제한된 손상,'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역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는 심각한 파탄을 맞을 수 있으며,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 결론적으로 만약 한중이 '선제적인 논의,' '제한된 손상,'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차 치열해지는 역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는 심각한 파탄을 맞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한중관계의 결과는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타이완과 ASEAN 국가들에게도 무시 못 할 함의를 던질 수 있음.

4-3. 미중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원칙 확립

➤ 만약 미중의 무역 갈등을 포함한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또는 전략적 입장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세밀한 자구(字句, wording)의 '원칙' 확립이 필요함.

-
-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한국이 ‘원칙’ 없이 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만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향후 미중 모두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은 물론, 미중 모두로부터 전략적 불신을 당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욱 큰 국익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음.

〈사례 1 : 세밀한 자구〉

≫ ‘원칙’은 자국의 정체성과 내부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의 표출이 항상 미중 사이의 선택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님.

≫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일본이 중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분리하여 사용한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라는 자구임.

- 2018년 10월 25~27일 일본 총리로선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는 시진핑 주석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모음.²²⁾
- 실제로 양국은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며 중·일 기업 간 약 50여건에 달하는 18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금융 협력도 확대하였음.
-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 ▶ 시 주석은 중·일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왔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해 상호 이익을 심화시킬 것을 제안함.

22) “Abe and Xi agree to promote new economic cooperation amid U.S. trade war fears” The Japan Times (Oct. 26, 2018); “习近平会见日本首相安倍晋三” 新华网 (2018年10月26日).

▶ 아베 총리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경쟁에서 협력이라는 일·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선 ‘잠재력이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함.

●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위해 중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며, 민간기업의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음.

▶ 단, 세코 경제산업상은 제3국에서 중일 간 협력의 결과가 ‘일대일로’의 개별 프로젝트와 일치할 수는 있다고 여운을 남김.

≫ 결과적으로 일본은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라는 자구 표현을 내세움으로써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 또는 ‘관망’의 자세를 취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일본에게 실질적인 경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역인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분리하여 이끌어냄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또한 이어가는 모습임.

● 즉, 자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기반을 둔 원칙의 설정이 필연적으로 ‘미중사이의 선택(taking a side)’이 아닌 ‘현안에 대한 입장(taking a position)’으로 나타날 수 있음.

〈사례 2 : 유리한 경기장 선택을 위한 원칙 강조〉

≫ 원칙을 세우고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유리하거나 또는 원하는 영역 또는 틀 내에서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관계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로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 동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학문적 접근의 영역에서 유리한 논의를 유도해 갈 수 있었으나, 일본이 선점한 ‘한일 양국 사이의 합의에 대한 파기’의 틀에서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의 논쟁이 시작됨으로써 한국이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초반 여론을 주도해 가는 양상이 나타났음.

» 이 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는 한국에게 유리한 ‘경기장’의 선택을 위해 분명한 한일관계 개선 3원칙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①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 특히 ‘전시 중의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임.
- ② 만약 한일관계에서 역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먼저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국제학계 및 한일 학계 간의 학문적 논의와 연구 결과의 도출 후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을 모색함.
- ③ 한일 간 과거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한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간 경제 및 외교·안보적 협력을 추구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즉 역사 인식과 경제/외교·안보의 문제를 분리하여 협력하는 틀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함.

4-4. 중국의 불안과 초조감을 피해나가는 외교·안보적 지혜 필요

»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무역협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내부적으로는 홍콩 시위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접근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권위가 손상되고 초조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감정을 앞세운 ‘대미 항쟁’ 분위기로 중국 지도부의 위상과 공산당의 권위 및 지도력을 보호하려는 상황임.

»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에 부딪치지 않도록 당분간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소나기’를 피해간다는 대응이 필요함.

-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은 對中 메시지 관리와 세밀한 외교적 자구 표현이 필요한 시기임.

4-5.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포석 마련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위해
‘투트랙’을 기반으로 한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베트남과의 2+2 전략 대화의
정례화 추진이 필요...

»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을 위해 ‘투트랙’을 기반으로 한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베트남과의 2+2 전략 대화의 정례화 추진이 필요함.

-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2+2는 외교와 경제가 주축이 되어 시작되어야 함.
- QUAD(미·일·호·인)에 이어 향후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은 ‘한국-타이완-필리핀-베트남’이 될 것임
-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향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역할 차이를 미국에게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